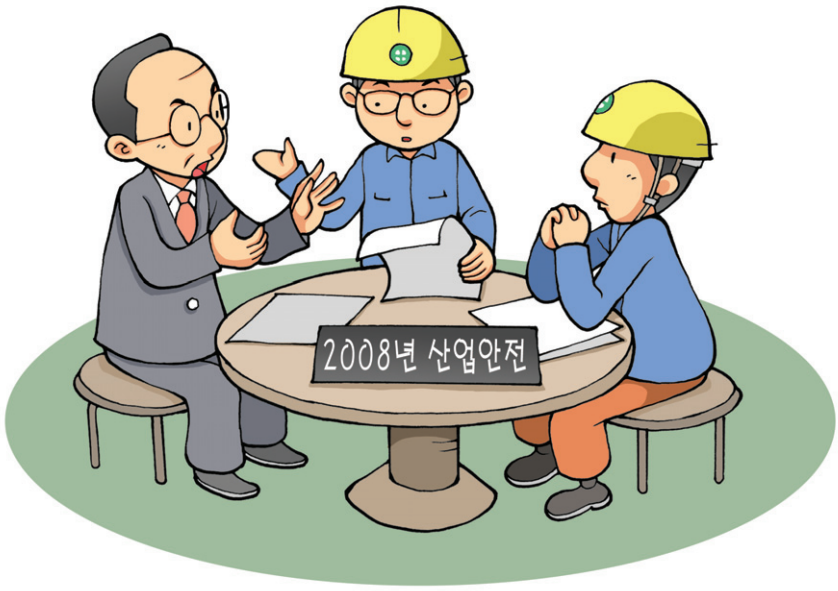
2008년 산업안전 이렇게 변해야 한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



1. 서론

2008년 1월 7일, 믿을 수 없는 후진국형 화재가 또다시 이천 냉동물류창고 지하에서 발생하였다. 어처구니없게도 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 40명이 희생된 끔찍한 대참사였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회 안전망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사기업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국가에서 일일이 다 감독하냐고 담당자들이 하소연 할지라도 결국은 관리체계가 낳은 안전 불감증의 증거일 뿐이다.

화마에 무참히 희생된 것은 분명 불을 잘못 다룬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관리한 기업, 결국은 국가의 책임, 특히 산업안전과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관계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취급당해온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안전문제는 이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분야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이나 치안의 문제에 버금가는 부문이 '안전'이라는 지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로 무려 120조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로 한해 6,300여명, 산업재해로 2,500여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좌표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의 개명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이다.

* 안전관리자의 역량 및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차등 부여
* 중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여 재해율 감소

2. 산업안전의 당면 과제 및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분야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치유되어야 하는지 고찰하면서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 안전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의 원천 봉쇄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자의 역량 및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차등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설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스태프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사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해당 업체와 별도의 제3자에게 수행토록 하고, 공사 중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하지 못한 방식에 의한 공사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목적을 위해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할 경우,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 밖에 건설공사의 특성상 예산 편성 및 공사기간 설정 등에서 발주자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시공자 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지도, 조언, 중지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덧붙여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경력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경력이 많은 안전관리자는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경력 및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공사수준 및 난이도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원청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하여야 하고, 재해 발생시에도 원청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취약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재해 발생율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발생율이 전체 재해 발생율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장의 재해를 줄이지 못하고서는 전체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없다.

중소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서비스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의 기본적인 안전시설 및 설비가 필수적이며, 기업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책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위험성이 높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서비스의 지원 및 안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지도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직업병이 발생한 화학물질의 유통 · 사용실태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 · 관리체계 구축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확대
*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 안전교육 법적 의무강화 및 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
* 산업 현장 근로자 및 전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의 고취
* "빨리빨리" 산업문화 개선

셋째, 직업병이 발생한 화학물질의 유통 · 사용실태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관리체계의 구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안전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정책적 관심이 점차 보건에 관련된 문제로 옮겨지고 있고, 산재예방정책에서 보건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보건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보건 분야에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발생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중독 사고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해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방안 제시 등 위험성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로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구축 및 건강증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총 사고로 인한 손상환자는 2006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292,6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1,688,79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9,910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 2,453명, 부상 78,343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9,114명에 이르며, 재해율은 0.77%이었다. 이는 2005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14.39% 증가, 근로자 수는 5.69%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는 5.27%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2005년도 수준을 유지한 수치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163,769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4.56%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5,818,845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4.56%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71,163,565일로 2005년 대비 2.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의 산재예방 예산은 거의 전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산재예방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예방대상은 산재보험으로 받는 근로자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은 사고나 직업병의 예방적인 보호조차 취약한 상황으로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 및 사회적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은 산재보상보험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따라서 산재예방을 위한 재원의 다양화 및 정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순수 산재예방투자 규모는 약 200억원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소득수준, 직업적 손상자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산재예방투자는 최소한 연간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재예방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위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이 안전교과목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비율이 OECD 가입국가 중 최고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의 법적 의무화 등 제도적인 변환 및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령별, 수준별, 계절별 안전교육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 지도서를 개발·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케 할 안전교육 교사의 확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대학을 비롯한 초등교사 양성 교과과정에 안전교육론을 개설하여 미래의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기초, 전문 지식을 확보하게 하고 향후 어린이 교육에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관련학과 졸업자로 하여금 교직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들을 교원으로 양성하는 한편 사범대학 학생들도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직이수자들은 필수적으로 안전보건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 및 교직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여섯째,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및 전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빨리빨리"의 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로 표현되며 높은 교육수준과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다.

특히나 반세기 만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놀라운 경제발전은 매년 경제성장율 10% 안팎을 넘나들며 타국가의 경제발전 모델로 급부상하였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은 모든 기업이 성장 제일주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처럼 단시간에 국가경제의 외연이 성장한 모델을 찾는 것은 한 동안 잊어버려도 될 만큼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성장 제일주의는 부작용처럼 많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한 기업의 지출 증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최근에는 기업 성장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90년대보다는 미약하지만 매년 경제성장율 3~5%를 기록하

며 성장 제일주의가 아닌 안전 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계한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13만9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천105만9천19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만5천411명이 발생(사망 2천493명, 부상 7만6천518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6천400명)하였고 재해율은 0.77%였다.

2004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8.75%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5.60%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는 3.90%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9.41% 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 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약 3조원이었으며,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5.80%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6천918만 8천477일로 전년대비 12.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를 보면,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 제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기업에서 추구하는 안전제일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있을 것이며, 운영 중인 기계설비의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계에 안전이라는 단어는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왔지만 그 안전이라는 의미는 단지 눈에 보이는 안전만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을 착용하고 안전구호를 외치며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안전과 구호뿐인 안전은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3. 결 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해이기도 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산업 현장 구석구석에서 혼신의 땀을 흘리며 밝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근로자의 삶이 그대로 묻어난 시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합병, 구조 조정 등 많은 변화와 개혁 속에 우리들의 위치를 위협당하고, 갈수록 높아만 가는 경쟁력이라는 파도 속에서 개개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만 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 저하에 따르는 현상으로 우리들의 경제력 손실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는 터전 곳곳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산재해 있고, 이곳에는 안전사고와 재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무의식 속에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단지 인간이기에 범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자위하려 하지만, 다가오는 그 이면의 아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직 · 간접적인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해 정부예산의 10%를 넘나든다고 한다. 이러한 손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는 달리 예방 ·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손실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클 것이다.

경제적 손실도 중요한 일이지만 개개인의 산업 재해로 인한 파급 문제는 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생존권 자체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로 당면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갖는다.

큰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행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초를 다투듯 급변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안녕은 그 만큼 절실하게 느껴진다. 한 번 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희망찬 가정과 일터를 위해 올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